



【미디어로 본 환경】

국민 93.4%, 환경문제 심각하다



국민의 93.4%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상황을 100점 만점에 47.9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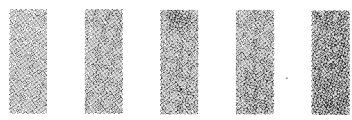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지난 2000년 2.5%에서 1%로 크게 감소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의 10.5%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환경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통신수단을 통해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해서는 81.9%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65.8%가 각각 반대했고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및 식용자 처벌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했다.

수돗물은 71.5%가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답변했고 그 이유는 '막연히 불안해서'(32.2%), '냄새가 나서'(31.2%), '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11.2%) 때문에, '물



맛이 나빠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지난 2000년 2.5%에 비해 크게 줄어든 1.0%에 불과했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마신다는 대답은 같은 기간 2~3배 이상 늘어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10.5%에 그쳤으며 수도권지역 주민의 56.9%, 비수도권지역 주민의 63.4%(전국적으로는 60.4%)가 수도권의 입지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완화에 찬성한 응답자는 3.3%(환경관련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개선 비용은 57.6%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고 정부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환경오염 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76.8%), 환경복권 발행(1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주체별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 시·군·구, 국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한데 비해 지역개발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지적은 73.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율 3.1% 포인트다. [연합뉴스 9.2]

환경聯 등 시민단체 정치참여 선언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들은 지난 9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천인 선언"을 발표하고 "낡은 정치를 대체하기 위해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해온 각계 인사들이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주체적

정치참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 개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신당창당을 시사했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병모 민변 회장,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1천13명이며 참여연대, 경실련은 불참했다. [중앙일보 9.9]

환경분야에도 토론문화 시행

환경분야 공무원 Study Group 운영

울산시는 환경분야에도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울산시는 지난 9월부터 월2회 "환경분야 공무원 Study Group"을 운영한다고 말하고 9월 1회차는 중순에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현안문제 발생시 부서간의 이견으로 시 전체의 환경정책방향 혼선 및 시민의 환경행정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분야 공무원 Study Group에서는 환경에 대한 당면 현안문제, 환경정책방향, 새로운 환경시책 발굴 등을 토론의 주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Study Group 운영은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 담당부서장이 교대로 진행하며 참석대상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의 6급이상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조사, 대기연구, 수질연구과의 근무경력 10년이상 된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참여하게 된다.

운영 방법은 월중 1회차는 환경분야 전반에 대하여 환경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순번제로 토론주제를 정하여 주재하고 월중 2회차는 수질·대기 분야별로 환경정책부서와 환경관리과부서가 토론주제를 정하여 발표 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Study Group에서 토의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환경분야 전부서, 구·군 열람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E-mail로 전송한다.

딜레마 빠진 환경운동

주민 갈등 꼬이고... 오랜 싸움에 지치고



새만금, 원전센터,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터널, 경인운하, 한탄강댐... 환경단체들이 쫓겨는 3년, 길게는 6년째 싸우고 있는 이슈다.

참여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등 꼬여가는 형국이다.

똑같은 문제가 몇년째 되풀이되면서 지켜보는 시민들도 식상했다. 때론 환경단체들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고개를 가웃거린다. 중도 포기할 수도 없고, 활동가들도 지쳐가면서 환경단체들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들 이슈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시민단체의 대립 구도 탓이다. 일반적인 사회갈등은 정부나 시민단체가 중재해 해결하지만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싸움을 해결할 주체가 없다. 지역 갈등에 발목이 잡힌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더욱이 개발-보존의 갈등이 "지역 자존심"과 결부되면서 대립 구도가 복잡해졌다. 새만금 간척을 요구하는 전북지역은 물론,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둘러싸고 영남 각 지역의 요구도 거세다.

이 때문에 "백지화" "재검토"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각종 개발사업

에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 리더들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각 이슈들에 일손이 묶여 있고 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은 염두도 못낸다는 것이다. 기존의 무거운 이슈 속에서 너무 가벼운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간 연대도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크고 작은 시민·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반핵국민행동" "댐반대 국민행동" 등 이슈별로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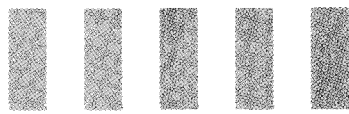
그러나 이름만 연대일 뿐 실질적인 활동은 몇몇 대형단체가 도맡아 한다. 이들 대형 단체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연대를 유지하지만, 조직 운용 부담과 재정 압박이 크다.

때문에 "정부가 차라리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한꺼번에 정리·발표하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서로 양보하는 식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활동가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PCSD)가 중재자로 거론되지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환경마인드"가 관건인데, 그런 조짐이 없다는 이유다. 어쨌든 환경단체들은 조직의 활성화나 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슈 중심의 활동을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환경운동 전반을 재정리하고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세운 정부의 성장논리와 그에 따른 환경의 질(質)문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 등 그동안 소홀했던 사



안에 대해서도 차분히 따져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중앙일보 9.16]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실효성 논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거액을 들여 대규모 도립 환경교육센터의 설립을 추진기로 했으나 환경단체들이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전시성 행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 오는 2005년말까지 360억원을 들여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 도내 환경교육기능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연천군 일대에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 교육을 담당할 권역센터 1호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센터는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경기도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설 하남시나 연천군의 경우 도내 주요 도시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어린이와 학생, 주부 등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대규모로 짓기 보다는 권역별로 나눠 주민친화적인 소규모 시설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무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센터설립과 관련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도내 환경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지시했으나 도내 환경단체는 빠진 채 중앙에서 활동해온 전직 환경운동가의 의견만 수렴하고 운영위원의 일부 선임권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청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환경운동단체의 관계자는 "환경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권역별로 지어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경기도청의 일부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횡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단 거점 센터를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권역별 지역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또 2010년까지 600억원을 들여 시흥시 장곡동 폐염전과 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등 3곳 135만평에 생태공원 3곳을 조성하고 40억원을 들여 남양주시 진중2리 등 2곳을 생태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겨레 9.17]

'건강도시' 프로젝트 뜬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5일 서울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도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박민수 시 보건과장은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민소득 수준, 환경오염, 교육수준 등이 50%, 개인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습관, 운동량 등이 30%,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보건 사업이 10%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개인의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 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전문가를 영입해 유럽의 '건강도시' 실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의 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 안에 짚 계획이다. 시 보건과 이현주 씨는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등 시민들이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습관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직장인 대부분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못해 고혈압·뇌졸중·당뇨·심장질환등에 걸리기 쉽다. 흔히 개인이 게을러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건강도시'에서는 이를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최



【미디어로 본 환경】

사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회사에서 조직원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건강도시'는 1987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유럽지부 11개 시범도시에서 시작됐고, 현재 전세계 약 2천여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기 과천시에서 1998년부터 '건강도시' 사업을 벌인 바 있다.

과천시는 '건강도시' 사업으로 건강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겨레 9.16]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14조원

"푸짐한 상차림" 주원인



과도한 상차림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이 넘는 음식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727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10% 이상 남긴다는 응답자도 4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원인으로는 59.1%가 "푸짐한 상

차림"을 들었으며 "과도한 접대문화"(20%), "필요이상의 식품구입"(19.7%) 등도 문제가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정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과도한 음식조리(49.6%), 음식보관의 잘못(22.9%), 필요이상의 식품구입(21.3%) 등이 주된 발생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가정내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6조원에 달하고, 음식점의 경우 8조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습관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일보 9.4]

경남 초·중생 60% 주위환경 오염

경남지역 초·중학생의 60%정도는 주위환경이 오염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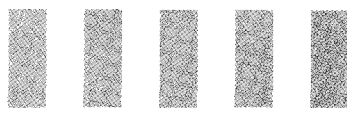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장 배성근 창원대 환경공학교수)가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환경기초시설 견학교육에 참가한 초·중생 1천2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에 대한 설문 결과 드러났다.

지난 9월 4일 개발센터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학생 중 20.7%는 주위환경이 아주 오염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39%는 조금 오염, 보통 28.6%라고 답했고 깨끗하다는 8.5%, 아주 깨끗하다는 0.9%에 불과했다.

또 가장 많이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쓰레기가 42.5%로 가장 많았고 물의 오염 39%, 공기오염 13.6%, 소음 4.6%순이었다.

이들 학생은 환경학습기회에 대해서는 TV 등 매스컴 48%, 선생님 25.1%, 가정 9.3%순으로 응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응답학생들은 환경과목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필요하다와 조금 필요하다는 입장이 각각 31.7%



와 37.1%로 나타나 필요없다(4.5%)거나 아주 필요없다(3.4%)에 비해 월등히 많아 환경과목의 교과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이들 초·중생은 환경관련행사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에 적극 참여(12.2%) 또는 참여(30.4%)한다고 답한 학생이 많아 환경행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9.4]

환경시설 빅딜 엇박자

오산시와 화성시가 각 지자체 간 환경기초시설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빅딜이 주민반대 등 난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3일 오산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 설치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받는 대신 화성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 오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지난해 10월 환경기초시설 공동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환경기초시설 협약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오는 2005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성 발안지방산업단지 내 설치하려던 소각장 시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 발안 산업단지 내 소각장은 5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일 3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현재 답보상태에 놓였다.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 일일 5만7천t의 하수 처리용량을 7만5천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2005년까지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해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해 올해 입찰안 내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가서야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행정절차가 늦어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늦어질 경우 동탄 신도시 하수 처리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 1천억원의 오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예산은 오산이 227억원, 화성이 150억원, 토지공사가 628억원씩 분담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분산되어 있는 사업비를 제때에 조달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시설유지관리비용 절감을 비롯한 오산천 수질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게 될 화성 동탄 신도시 첫 입주하는 오는 2006년 12월 6천600여세대가 시범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중부일보 9.4]

환경부 장관, 직원비리 사과



한명숙(韓明淑) 환경부장관은 지난 9월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환경부 직원의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과정

에서 담당직원이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직당국의 수사결과를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머쓱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 직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저버린 셈이 되어 한없이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선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취약업무 분야별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표준업무지침을 마련하며 상시감사체제를 도입하



【미디어로 본 환경】

는 등 철저한 개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9.4]

종량제 봉투가격 천차만별

부산, 전북보다 3배 비싸

부산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전북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가격은 765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쌌으며, 저렴한 곳은 전북 218원, 경북 246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봉투가격은 전북에 비해 3배 이상,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377원보다도 2배 이상 비싼 것이다.

지난해 각 시·도별 봉투가격은 인천 578원, 광주

470원, 대전 436원, 대구 430원, 경남 399원, 경기 379원, 울산 374원, 서울 337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9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도별 가격변화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95년 255원에서 2002년 280원으로 7년 동안 25원(10%) 인상되고, 충북이 253원에서 272원으로 19원(7.5%) 인상됐다.

반면 인천시는 214원에서 578원, 광주시 200원에서 470원, 부산시 279원에서 769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제주, 충북에 비해 매우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서울시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95년 265원에서 지난해 337원으로 7년 동안 72원(27%) 올랐다.

한편, 10ℓ 짜리의 경우도 부산시가 396원으로 전북 115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290원으로 2위를 차지한 인천시와도 100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 평균인 192원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일보9.18]

10월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 유해가스 처리기술 및 집진장치 유지관리 기준

10월 6일 ~ 10월 8일 (3일간)

♣ 생물학적 벌킹 제어 및 활성슬러지 공법 현장실무전문기술

10월 29일 ~ 10월 31일 (3일간)

문의 : (02)852-2291